

CEO Report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2013. 3

이승준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CONTENTS

I. 서론	1
II. 보험 상품 및 수요	7
1. 생명보험시장	7
2. 손해보험시장	8
3. 제3보험시장	10
III. 경영전략	14
1. 공정거래	14
2. 지배주주 감시	15
3. 소유지배구조	15
4. 판매채널	16
5. 고용 및 인력운용	17
IV. 감독정책	19
1. 금융소비자 보호	19
2. 유사보험 감독	20
3. 금융안정성	20
V. 요약 및 시사점	22
1. 요약	22
2. 시사점	23



I. 서론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 국정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과 국정과제를 제안하였음.

- 인수위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를 제시함.

1.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2. 맞춤형 고용·복지
3.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4. 안전과 통합의 사회
5.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 인수위는 또한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추진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21대 추진전략과 140대 국정과제도 함께 제안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새정부의 각 부처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게 됨.

- 또한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는 개방·공유·협력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신뢰받는 정부”를 표방하였음.

- 특히 5대 국정목표 중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의 경우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맞춤형 고용·복지”는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을 망라하고 있음.

표 I-1

박근혜정부 국정비전, 국정목표 및 추진전략

국정비전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1.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1.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3. 중소기업 창조경제 주역화 4.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5.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6.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
	2. 맞춤형 고용·복지	7.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8.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9.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10.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3.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11.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12.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13.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
	4. 안전과 통합의 사회	14.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15.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16.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17.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18.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5.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19.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20.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21.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추진기반 : 신뢰받는 정부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정부 3.0 달성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

■ 이 보고서는 인수위가 선정한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와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제시된 추진전략 및 국정과제를 경제정책 및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들 정책이 향후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함.

- 인수위가 제시한 경제 및 복지정책은 소위 “근혜노믹스”의 근간으로 전체 140대 국정과제 중 절반에 근접한 68개의 국정과제가 제안되었음.

■ 인수위가 제시한 경제정책 관련 국정과제를 보면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에 근간을 두되 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한 환경조성에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박근혜정부에서는 과학기술, 생산기반시설, 금융 등 인접 서비스, 공정거래질서 등의 진흥 및 확충을 주요 경제 분야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 복지정책 관련 국정과제는 “맞춤형” 복지로 국민 개개인의 니즈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 복지를 추구하고, 복지제도가 취업 및 생산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소외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생산적 복지를 표방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 권익 및 편의, 다문화가정 적응, 양성평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정부가 개입하여 복지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이미 발간된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와의 연속성을 살리기 위해 국정과제의 내용을 보험 상품 및 수요, 경영전략, 감독 정책으로 나누어 분석함.

- 보험 상품 및 수요는 새정부의 경제 및 복지 정책이 생명보험, 손해보험 및 제3보험에 미치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함.
- 경영전략은 새정부의 경제 및 복지 정책 중 공정거래, 지배주주감시, 소유지배구조, 판매채널, 고용 및 인력운용 관련 정책을 분석함.
- 감독정책은 새정부에서 예상되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정책 등이 금융 및 보험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음.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1.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1.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1.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 2.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3.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4.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5.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6.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7.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8.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 9. 고용친화적 정부정책을 위한 고용영향 평가제 강화 10.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11.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12. 농림축산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13. 해양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 14. 수산의 미래 산업화 15.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16. 고령 친화산업 육성 17.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18. 해외건설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
	3. 중소기업 창조경제 주역화	19.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20.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21.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2.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23.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4.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24.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25.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27.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체계 선진화

표 I-2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관련 국정과제 (계속)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1.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5.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28.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29. 소비자 권익보호 30.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31.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32. 기업지배구조 개선 33.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6.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	34.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35.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36. 부동산 시장 안정화 37.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38.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 39.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40. 건전 재정기조 정착 41.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주: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정과제는 굵은 글씨로 표시함.

표 I-3 박근혜정부 복지정책 관련 국정과제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2. 맞춤형 고용·복지	7.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42.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43. 국민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개선 44. 건강한 가정 만들기 45.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46.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47.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48.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복지의료 서비스체계 구축 49.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 50. 다문화 가족 적응 지원강화 51.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8.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52.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53.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54.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55.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9.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56. 주거안정 대책 강화 57. 서민 금융부담 완화 58. 교육비 부담 경감 59. 통신비 부담 낮추기 60. 농어가 소득 증대 61.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62.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63.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64.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
	10.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65. 행복한 임신과 출산 66.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67.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68.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주: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정과제는 굵은 글씨로 표시함.

II. 보험상품 및 수요

1. 생명보험시장

〈국정과제 46 :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 국민행복연금 도입

- (추진계획)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1인 1연금을 통한 노후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표 II-1 국민행복연금 도입방안

국민연금	현행 유지			
기초연금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전체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연금액	소득하위 70%	무연금자 20만 원	부부가구는 기초연금에서 각각 20% 감액
			국민연금 수급자 14~20만 원	
		소득상위 30%	무연금자 약4만 원	
			국민연금 수급자 4~10만 원	
	시행시기	2014년 7월		

자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2013. 2).

- 기초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공무원이나 교사 등 특수직 역은 제외)를 대상으로 하되 부부가구는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
 -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연수를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며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은 최대 20만 원 수령이 가능하며 소득상위 30%인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약4만 원 수령
 - 정부 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구체적 방안 마련
- (대선공약과의 비교) 다른 조건 없이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현행 94,000원의 노령연금을 2배 수준 인상하려던 대선공약에서 재원 조달과 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수정됨.
 - (영향)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들 중 소득이 상위 30% 구간에 해당하는 계약자는 기초연금이 10만 원 이하에 불과하여 사적연금보험의 가입 수요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적연금가입자의 경우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사적연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손해보험시장

〈국정과제 60 : 농어가 소득 증대〉

■ 농림어업 재해지원을 위한 보험·지원제도 전면 개편

- (추진계획) 재해대상 품목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장범위 및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재편

- 사과·배·단감·뽕은 감·감귤은 종합보장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 국가재보험 기준손해율을 하향조정하고 전문 손해평가인력 양성 및 통계조사 강화 등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
- (영향) 정부의 지원 확대로 보험시장 규모도 약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재보험 기준 손해율의 하향으로 다소 나아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수익성 확보 여부는 의문임.

〈국정과제 94 :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¹⁾〉

■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확립

- (추진계획) 유독물생산자 등에게 환경오염피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원인자 미상 피해의 구제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며 2013~2014년 중 법제화
- (영향) 환경오염피해보험 의무가입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손해보험의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나, 시장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1) 국정과제 94는 국정목표 4(안전과 통합의 사회) 중 추진전략 15(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의 내용 중 하나임.

3. 제3보험시장

〈국정과제 47 :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가. 건강보험

■ 4대 중증질환의 필수 의료서비스 급여화

- (추진계획) 4대 중증질환²⁾에 대해 필수적인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보장하여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을 2016년까지 100%로 확대
 -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환자 부담완화대책 수립
 -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도 단계적으로 급여화 추진
- (대선평약과의 비교) 대선평약에서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를 전액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하려 했으나 재원 문제로 수정
- (영향) 국민건강보험의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확대로 민영건강보험의 담보범위가 축소되고, 따라서 지급보험금의 감소와 민영건강보험의 시장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음.
 - 단, 보장범위가 넓고 소액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가입률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지급보험금의 감소로 인한 보험료 인하는 장기적으로 가입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있음.
 - 또한 암보험과 같은 정액형 건강보험은 동 정책으로 인해 수요가 다소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소득상실리스크도 보장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입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2)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적용

- (추진계획) 2016년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를 건강보험 급여화
 - 2014년 75세, 2015년 70세, 2016년 65세로 순차적으로 하향 조정
 - 현재 75세 이상 노인들만 보험급여 적용 연령도 65세로 동일하게 하향 조정
- (대선공약과의 비교) 대선공약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어르신부터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재원을 고려하여 부위별로 확대 적용
- (영향) 국민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임플란트와 틀니를 담보하면 민영건강보험의 치아보험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보임.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 (추진계획)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3등급(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7등급으로 세분화
 -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120만 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500만 원으로 높여 조정
- (대선공약과의 비교) 대선공약에서는 최하위 저소득계층부터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 500만 원으로 본인부담상한금액을 10단계로 설정
- (영향) 본인부담의 경감으로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유인이 낮아지고, 이미 가입한 계약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분에 대한 지급보험금이 감소되어 보험료 인하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음.

- 민영건강보험은 본인부담상한금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자에 대한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험금지급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나. 간병보험

■ 국가치매 관리체계 확립

- (추진계획)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 신설 검토 및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 추진
- (대선공약과의 비교) 장기요양등급에 4~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환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에 우선 편입
- (영향) 공적간병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3등급까지 간병급여를 지원해 왔으나, 치매등급을 신설하고 국가가 보장을 확대하면 민영간병보험의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 독거노인 돌봄 강화

- (추진계획)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老老케어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 체계 동원을 통해 독거노인 돌봄 부담 해소
- (대선공약과의 비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부여부를 판정할 때 생활 환경에 대한 점수를 포함시키고, 4등급과 5등급을 신설하여 대상 확대
 - 신체장애가 있는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 (영향) 이들 계층은 민영간병보험의 가입 여력이 미약하며 실제 보험가입자도 적어 보험시장의 수요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국정과제 48 :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 노인의료체계 확충

- (추진계획) 회복병원 체계 강화, ‘의료+요양+생활 통합서비스’ 활성화, 호스피스 및 가정간호 등 노인의료체계 확충
- (영향) 공공부문의 노인복지 및 노인건강에 대한 보장이 확대되더라도 현재의 정액형 장기간병보험 수요는 보험가입여력이 낮은 경우에만 영향을 받음.
 - 그러나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의 경우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시장성이 더욱 작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공적체계의 신장은 민간영역을 구축(crowd-out)하는 효과를 부름.

Ⅲ. 경영전략

1. 공정거래

〈국정과제 30 :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

- (추진계획) 공정거래법 상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명시적으로 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을 갖는 제외신청(opt-out) 방식으로 추진
 -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위반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 부여하고 해당 기관 요청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고발
- (영향 및 대응) 공정거래법 강화는 보험회사들의 담합행위에도 적용되므로 법규준수리스크의 증가에 유의하여 보험회사를 운영하여야 함.

2. 지배주주 감시

〈국정과제 31 :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사익편취행위 근절〉

■ 지배주주에 대한 감시 강화

- (추진계획)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 및 강화와 지배주주 등의 횡령, 사면권 상신,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등에 형량 강화, 대기업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엄격하게 상신
 - － 공정거래법 제3장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위한 규정을 신설
 - －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 강화하고 부당이익은 환수
- (대응) 대기업집단에 속한 보험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특히 계열사와의 거래 시에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음.

3. 소유지배구조

〈국정과제 32 : 기업지배구조 개선〉

■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 (추진계획)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집단 지배시스템 개선 및 금산분리 강화
 - － 기존 순환출자도 자발적·점진적 해소 유도
 - － 감사위원을 맡을 사외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
 -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는 허용하되 일정요건 충족 시 중간 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 강화
- (대응) 보험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유지하고, 충분한 경영 및 지배 구조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4. 판매채널

〈국정과제 62 :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 (추진계획)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 및 고용 보험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
- (대선공약과의 비교)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제도를 설계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
 -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 ※ 특수고용직 근로자 : **보험모집인**,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송 차주, 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 텔레마케터
- (영향 및 대응) 설계사 중심으로 운영 중인 보험회사의 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한 보험료도 추가로 부담해야 함.
 - 따라서 보험회사는 판매채널의 다변화도 장기적인 경영전략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고용 및 인력운용

〈국정과제 63 : 장시간근로 개선 및 정년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 임금피크제와 연계된 단계적 정년 연장

- (추진계획) 노사정 공론화를 통해 정년 연장을 추진하되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 － 정년 의무화 이전까지 고용지원금제도 개편 등을 통해 자율적 정년 연장 유도 및 「2050 함께 일하기 캠페인」 등 공감대 확산
- (대선공약과의 비교)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정년을 60세로 연장함(「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 (대책) 고령화 추세와 함께 정년연장은 사회적인 필요에 의한 제도변화이므로 장기적으로 이를 고려하여 회사의 인사 및 고용계획을 운영해야 함.

〈국정과제 64 :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

■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 (추진계획) 업무재조정이나 무급휴직 등 판례상 해고회피 노력 인정 사유 명문화 등 해고회피 노력 강화
 - － 경기호황으로 일이 많을 때는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하고, 경기불황시에 유급휴가를 활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
 - － 사용자는 해고자에게 서면으로 재고용 우선권에 대해 알리고 재고용 의무기간 동안 관련 채용계획 통지를 의무화

- (대선공약과의 비교) 근로자 해고요건을 강화하고 사측의 일방적 인력구조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립 운영
- (대책) 구조조정이 앞서 기존의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보험회사의 인사 및 고용 계획을 수립해야 함.

IV. 감독정책

1. 금융소비자 보호

〈국정과제 29 : 소비자 권익 보호〉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추진계획)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고 소비자 역량 강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 －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 － 금융, 교육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 모니터링 지속 실시
- (대선공약과의 비교) 연금상품 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금융회사 성과비교가 용이하도록 비교 공시체계를 구축하며, 금융수수료, 영업관행 등을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
- (대책) 상품비교공시 체계의 정비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상품설계 단계에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 소비자 지향적인 보험 회사 운영이 필요
 -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막을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로 굳어짐.

2. 유사보험 감독

〈국정과제 3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 유사보험 감독 강화

- (추진계획) 한미FTA 협정사항³⁾의 이행 차원에서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보험부문 등 유사보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민영보험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
 - 금융위원회(신협), 해양수산부(수협), 안전행정부(새마을금고),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여 관련법규 개정
- (영향)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이 보험회사 수준으로 강화되면 공정한 경쟁 기반이 마련되고 보험계약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3. 금융안정성

〈국정과제 35 :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 제2금융권 대출 모니터링 강화

- (추진계획) 보험회사와 상호금융 등 가계대출 규모가 큰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속도와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권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차주의 상환부담 경감 노력을 지원하도록 유도

3) 한미FTA 제13장 부속서 13-나 제6절: 분야별 협동조합 판매보험(Annex 13-B Section F : SECTORAL COOPERATIVES SELLING INSURANCE) 및 부속서 13-라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공급(Annex 13-D Supply of Insurance by the Postal Services to the Public).

- (영향) 보험회사의 약관대출과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가계대출에 대한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즉시적 개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체계를 유지 및 보완

V.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표 V-1 새정부 주요정책이 보험산업에 주는 영향 요약

분야	주요정책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상품 및 수요	국민행복연금 도입	연금보험수요 일부감소	
	농림어업재해보험·지원전면개편	-	영향 적음
	환경오염피해보험제도 도입	-	새로운 시장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 강화	영향 적음	시장 축소
	65세 임플란트 건강보험급여	수요 감소	수요 감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개선	-	시장 축소
	국가치매관리체계	-	수요 감소
	독거노인 돌봄 강화	-	영향 적음
	노인의료체계 확충	수요 감소	수요 감소
경영전략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법규준수 리스크 증가	
	지배주주 감시 강화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소유지배구조 개선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특수업무형태 종사자 산재·고용 보험 확대	보험회사 운영비용 증가	
	임금피크제 연계 정년연장	효율적 인력관리 필요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효율적 인력관리 필요	
감독정책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 지향적 회사 운영	
	유사보험 감독 강화	공정한 경쟁기반 마련	
	제2금융권 대출모니터링 강화	자산운용에 반영	

2. 시사점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안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를 검토한 결과 새정부의 경제 및 복지 정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보험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보험산업 수요에 주는 대부분의 영향은 공적 부조 및 보험의 급부 확대와 보험료 경감에서 오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민영보험의 시장규모는 일부 줄어드나 가입율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임.
 - 환경오염피해보험 의무가입제도는 보험회사에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제도의 정착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수익성도 의문임.
 - 농어업 및 임산물 재해보험의 확대도 수익성 있는 보험제도로 운영 되기에는 리스크 특성상 제한이 따름.
-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은 주로 공정거래 및 대기업집단 정책과 고용의 안정성 향상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와 정확한 경영 및 지배구조 공시가 요구됨.
 - 또한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에 따른 법률리스크를 고려한 경영전략도 필요함.
 - 새정부의 고용안정 정책에 대비하여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인사 및 고용계획을 세워야 함.
- 감독정책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가장 큰 축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 과제로 미루어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도 향후 보험산업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저자약력

■ 이 승 준

University of California-Davis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sjlee@kiri.or.kr)

CEO Report 2013-0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I)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발 행 일	2013년 3월
발 행 인	김 대 식
발 행 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인 쇄 소	경성문화사
	대표전화 786 - 2999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
(☎3775-9030)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